

제 13강 다중의 성격

◆1교시: 제국 안에서의 대안

▲민중의 사라짐

그러면은 이게 우리 이야기를 한번 돌려봤을 때, multitude는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전부 다 people 쪽으로 들어온 결과. 우리가 이 과정에서의 전환점을 68년으로 본다면 바로 이 노동에 대한 거부, 병역거부 바로 이러한 다양한 거부운동들을 거쳐 가면서 이 조직된 민중이 사라지는 것. 민중의 사라짐을 서서히 목격하게 되는데요. 이 민중의 사라짐에 대한 서술은 제국에는 민중에서 다중으로의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서술이 되지만, 들뢰즈 같은 경우에 아주 민중이 없어져 버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민중이 없어지는 유형들, 이것을 정치경제학이라거나 정치학적 분석보다는 오히려 예술 작품들에서 더 많이 살려내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전함포템킨이라거나 이런 것에서 등장하는 민중들, 항상 준비 되어 있는 민중들 - 이 민중들이 1950년대에 이탈리아에 네오리얼리즘 영화라거나, 60년대 프랑스의 고다르의 영화라거나 작가주의 영화들을 거치면서 그런 민중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주로 민중은 액션하고 관계되는데, 액션은 할리우드가 대명사이죠. 그런데 사회주의도 예술을 만드는 방식이 액션 중심이었다는 거죠. 행위 양식이 다를 뿐이지. 미국의 액션은 서부의 총잡이로 나타나지만, 사회주의 액션은 민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혁명 할 준비가 되있는 존재로 묘사가 되면서, 상황 상황마다 봉기를 일으키는 자동기계처럼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60년대 전후한 영화들은 방황, 회의, 탐색, 내적 위기,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인물들이 등장해가지고, 영화에서 스토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취를 감추는 거죠. 액션 영화는 스토리가 다 있는데, 신 영화들 속에서는 인물들의 내면성에 대한 성찰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뒤섞임, 그러면서 시간 그 자체에 대한 탐구. 시간이 선적으로 흘러 가는게 아니고 하이브리드화 되는 그러한 특징들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그거를 민중의 사라짐의 징후들로 읽죠. 그래서 민중이 사라져가는 그런 성격을 보이는데, 민중이 사라져가는 현상들을 네그리나 하트는 예컨대 노동에 있어서의 비물질노동, 생산의 영역에선 이곳에서 주로 찾는 겁니다. 노동 자체가 사회 전체에 산포되어 버리는, 지금으로 보면 아주 글로벌한 차원으로 산포되어 버리는 것. 그래서 공장과 군대라고 하는 장소에서 벗어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노동하는 존재가 병력을 하거나 뭔가 작업복을 입고 블루칼라로서 물질적 생산물을 창출하고 있는게 아니고, 사회 속에서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뭔가 지적이고 정서적인 생산물을 통해서 삶 자체를 생산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면서, 유형적으로는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누가 노동자다라고 손가락으로 가르키기가 힘들어져버리는 상황 속으로 들어간다 -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한 얘기죠.

▲재현의 한계와 다중의 재출현

그러니까 결국 들뢰즈가 말한 민중의 사라짐의 징후들이 경제적 층위, 경제적이라고 부르는 것겠지만 고전적으로는 경제적층이라고 불리었던 이곳에서 나타나고. 좀 더 저자들의 말에 가깝게는 생산의 영역에서 민중을 사라질 수 있는 조건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노동을 거부하고 병역을 거부하는 존재들, 그 사람들은 스스로가 고용을 회피하려는 사

람들. 스스로 고용 안 될려는 사람들이죠. 지금도 일본 같은 상황에서는 200만명 이상이 프리아르바이트 - 프리타족. 우리 식으로 그냥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죠. 아르바이트 해서 자기가 필요할 때 일하고 남은 시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걸 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공식 집계로만 그 정도가 된다고 하고... 당연히 그보다 훨씬 더 많겠죠. 한국 같은 경우도 백수 클럽이 있잖아요. 백수라고 불리워지는 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사람들도 사실상 많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유형의 한명입니다만, 지금처럼 백수죠, 뭐(웃음). 그래서 이 사라짐 - 어디론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 하나씩 사라져가지고 민중적 응집력, 이런 인민군이라거나 노동계급이라거나 이런 식의 방식으로 결합되지 않고, 장황하는 그러한 사회존재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모든 존재가 민중으로 되었다고 하는 순간, 민중이 사라지는 그런 역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게 인제 지금 어떻게 보면 Multitude라고 하는게 우리 시대에 와서... 앞에 neo라거나 new라거나 이런걸 붙여도 상관없겠는데요. 이전과는 다른 존재들로 재탄생하고 있다. 그게 지금 4 이후에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맨 처음에 두 유형의 힘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 virtuality와 actuality, res gestae와 rerum gestum - 이 두 유형이 있습니다. 두가지 유형의 힘이 있는건데... 이 두 유형의 힘의 관계는 이것이 더 근원적이라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을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 이게 전부 우리가 강조해온 핵심적인 주장이었는데요. 바로 이것을 명제로 표현하면 나. 에서 말하는 다중이 제국을 불러낸다. 여기가 인제 아까 수직 구조로 보면, multitude가 empire를 불러온다는 것이죠.

▲다중이 제국을 불러낸다

이 말이 오해를 많이 불러왔습니다. ‘그러면 결국 다중이라고 하는게 제국을 만들어내는 거고, 다중은 제국을 지지하는 받침대 아니냐?’라고 손호철 교수 같은 사람이 비판하고 그랬었는데, 다중이 제국을 불러낸다고 하는 용어는 이 virtuality가 actuality를 규정한다는 의미 -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국주의에서 제국으로의 이행과정은 제국주의하에서 사실은 모든 사회존재들이 민중으로 되죠? 제국주의 자체가 민중화의 과정, 집중적인 민중화의 과정이니깐요. 그래서 식민지를 통해서 자국경계 너머의 지역에까지 민중을 만들어나가는 일종의 풀무의 역할을 제국주의가 했지 않습니까? 일본이 조선에 철도를 깔고, 학교를 짓고, 공장을 세우고 그랬죠. 일본인들이 와서 한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문명화 사업들입니다. 철도 같은 사회간접자본이나 학교를 먼저 짓는 거(영국 사람들이 인도에 갔을 때 학교를 먼저 짓지는 않았거든요), 공장을 건설한다거나 토지 구획을 정비한다거나, 이런 전부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문명적인 방식으로 이 사회를 재조직하는 작업을 일본인들이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인제 민중들이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보다도 일제하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본의 그 총독부 권력에 대하여, 아마 이중적 태도를 가졌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무조건 반대하거나 그러질 않았단 가능성이 많았다는 것이죠. 싫을 때는 거부하지만 자기 이해관계하고 일치할 때는 그걸 또 거머잡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건 미국이 우리를 준식민지로 하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보였던 태도들이 그렇죠.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이 반대할 때조차 ‘무슨 얘기냐, 미국이 우리를 원조물자와 기타 한미동맹을 통해서 지켜주고 있는 보호자인데’하고 항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의 상황에서 많은 사람

들이 미국에 대해서 보이는 태도하고 일제시대 때에 민중들이 총독부 권력에 보였던 태도하고가 엄청 달랐을 꺼라고 생각이 안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국주의는 여하튼 지구 전역에 민중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내는 일종의 공장을 계속 건설해 나갔던 거죠. 사회공장을 건설해 나갔던 거고 그래서 민중이 완성이 되었는데, 이 민중이 바로 노동거부, 병역거부 같은 유형의 태도를 보이는 어떤 전환기, 1968 이 전환기 - 전후의 호황이라고 하는 것도 서부의 경우에 약 20~30년에 걸친 장기 호황이 있는데 이때 정말로 집중적으로 민중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죠. 정말로 적극적인 민중, 막 저항적 민중이기보다 협력하는 민중들이 대거 만들어졌었고, 이것의 모순이 폭발할 때가 60년대 말이라고 할 때에, 이것을 인제 경유하면서 요 아래로부터의 - 이거는 민중의 내적인 균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민중의 내적 균열 속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요구들을 어떻게든 재조직해야만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것이잖아요. 이 재조직화의 방법이 empire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만 제국주의에서 제국으로의 이행이라고 하는 이 과정은 이 내부에서의 민중의 분열, 그래서 다중의 탄생이라는 과정이 없었다면 이런 조치가 불필요한 것이죠. 그냥 제국주의적인 관계로 지배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의미에서 '제국을 불러온 것은 바로 multitude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계화, 지구화, 신자유주의

그래서 인제 많은 사람들은 제국이라는 말을 안 쓸 때, 보통 세계화, 지구화 이렇게 명명을 하고 거기에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붙이잖아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 이 과정이 최근 나타나는 과정이다. 근데 이거는 제국주의에 최근 형태이다, 발전 형태이다라고 말을 하죠. 제국주의이긴 제국주의인데 좀 다른 유형의 제국주의다. 신자유주의적 제국주의 - 이렇게 말하는게 기본적인 좌파 담론의 골조이죠. 그렇게 보면은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민족해방 사회주의였지 않습니까? 신자유주의적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것도 민족해방 사회주의이죠, 당연히. 왜냐면 제국주의라고 하는건 끊임없이 외부를 탐식해 들어가는 포식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물리치는 것은 바로 그 포식의 행위를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즉, 특정한 지역을 방어하는 것이죠. 우리 지역을 지켜야 된다, 지역방어라고 하는 이 세계화 논리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뭐 라틴아메리카 지키고, 아시아권 지키고, 아프리카 지키고 우리 같은 경우에 동북아시아권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게 제국주의 담론에 입각하여 지구화에 대항하는 방벽을 쌓아 나가려는 노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게 한국 같은 경우에 아제국주의로 나간다는거, 예를 들어서 - 그래서 동북아의 허브를 구축함에 있어서의 물류나 금융의 중심지로 우리를 성장시킬려 하는 거는 바로 우리라고 하는 지역, 한반도라고 하는 지역, 좁게는 남한이라고 하는 지역이 제국주의라고 하는 흐름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고, 바로 이 힘에 입각해서 더 국익에 이로운 관계망들을 확장해 나가기 위한 그런 구상이죠. 그건 일본이라거나 중국도 마찬가지로 동조한 거죠. 중국은 좀 상당한 정도로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 일본에는 또 국수주의로 등장하고 이런게, '맞어. 지역방어가 맞는 거야. 중국도 자기 지키려 하잖아, 일본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우리도 우릴 지켜야돼.'라고 함으로서 내셔널리즘에 기름을 부어넣는 그런 작업들이 이러한 이론체계 속에서 마치 뭇니까, 자동문답 형태로 짜르르륵 답안이 나오는 거죠. 근데 과연 이런 식의 파악이 옳으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게 제국 이론의 근본 입장인데... 지금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서 세계화 자체는 어떻게 보면 다중 자체가 불러낸 것이기 때문에 세

계화라는 쪽지를 빼고 지역화로 돌아가는 것. 작은 지역은 마을 지키기일테고, 큰 지역은 국가를 지키는 것이고, 더 큰 지역은 아시아라거나 유럽이라거나 북미라거나 이런 걸 지키는 거죠. 그래서 지역 블록화의 대안들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구화대신 지역화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노마디즘 논쟁 - 지역주의

최근에 노마디즘 논쟁에서도 보면은, 예전에 천규석씨가 맨 처음에 노마디즘은 침략주의다 해가지고 책을 썼잖아요. 근데 노마디즘이 침략주의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자크 아탈리 등등, 사실 자본가들은 노마드적인 삶을 지금 살죠. 동해변씩 서해변씩 홍길동처럼 움직이잖아요. 그러는 식으로 살아 나가는 자본의 움직임들의 들뢰즈의 노마디즘이 영양분을 제공해주게 아닌가 하는게 천규석 씨의 문제제기였었죠. 근데 이분은 일제 때부터 농민운동을 해온 사람이고, 해방 이후에는 유기농 사업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유기농을 접었습니다. 유기농이 완전히 부패했다고 해가지고. 그 이유는 유기농의 국제화 - 필리핀, 중국, 미국 등지에서 유기농이 몰려들어 오면서 유기농의 생태의 보존이라고 하는 어떤 가치관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배나 무슨 기타 요란스러운 교통수단으로 유기농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공기를 갓다가 더럽히고 화석 연료들은 고갈시키고 이런 식의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기농은 한국의 강남이나 그런 부유층 가정을 위한 특수작물이 되어지면서, 그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 땅이 썩고 공기가 완전히 부패되는 이런 식의 사태를 연출하고 있다는게 천규석씨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지역농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만한 마을에서 농약치고 어찌구 저찌구 하더라도 조금 작게 치고 해서, 같은 마을에 학교라거나 그 공공기관들이라거나 군부대라거나 하는데서 농민들하고 손을 잡고 서로 협력하는, 지역 협력론 이게 진짜 유기농이 아니냐하는 식의 관점 전환이죠. 그래서 현대의 유기농을 비판하면서 지역주의로 돌아섰는데, 노마디즘이 기업주의와는 상반된 관념체계이니까 노마디즘을 침략주의로 비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고런 식의 입장 - 이 지역주의로 돌아감으로써 글로벌의 문제를 과연 풀 수 있느냐, 세계화의 문제를 풀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게 과연 multitude의 욕구에 부합하는거나, 여기가 뭐 단일한 욕망을 가진 집합은 아니지만. 지역주의가 과연 해결책을 가져다 줄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주의는 끊임없이 전쟁의 관계, multitude 내부의 전쟁의 관계. 맨 처음에 community가 society로 나아가면서 전쟁을 도입을 했는데, 지금 글로벌하게 가는 것은 더 큰 전쟁을 도입하는 거죠. 전쟁의 일반화, 전쟁의 항구화를 가져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더 확대됐지만 더 큰 전쟁으로 되었는데, 이 전쟁을 다시 옛날과 이 지역, 이 사회에 이 어떤 공동체 이런 것들로 되돌리는 방법론, 이 어떤 복고적인 방법론 - 이 방법론이 해결책일 수 있느냐. 어쩌면 이 문제 해결을 거꾸로 계속 돌려가면서 지체시키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전통적인 좌파운동 - 이런 것들이 지역주의에 빠져들어 가는 것을 경계하고 지구화라고 하는 차원 속에서 전쟁을 극복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럼 그것은 당연 만약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이 범지구적인, 항구적인, 일반화된 전쟁 상태가 사람들을 수직적으로 가르는 전쟁이죠. 이 지역과 저 지역, 이 나라와 저 나라, 너와 나의 대립을 가르고 이 머리에서 이제 자본이 움직이는 것이죠. 이 구도를 깨버리고 이 수평적인 선을 도입하자는 겁니다. 그니까 자본에 대항하는, 공통의 적에 대항하는 multitude의 연합을 도입하자는 것이죠. 두 개의 유형의 전

쟁이 있는 거죠. 지역적인 전쟁 - 민족주의적 전쟁, 국가주의적 전쟁, 마을간 전쟁 - 전부 수직적인 전쟁은 흠을 파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이 전쟁을 확 돌려가지고 수평적인 전선을 도입하는 것.

원래 war하고 civil war하고의 차이가 있는데 civil war가 바로 이거, 수평선이거든요. 내전이라고 하는 게. war의 전통적, traditional war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선을 긋는 거죠.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거죠. divide and rule 하는 거죠. 쪼개서 지배하는 것. 쪼개고 지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 전쟁을 civil war로 돌리는 것이 과정인데, 이게 레닌의 테마였잖아요. 전쟁을 내전으로. 근데 이 내전의 도입이라고 하는 문제가 불필요해졌다는 겁니다. 왜? 사실은 이미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레닌의 경우에는 이걸 자꾸 도입을 해야 했고, 실제로 도입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전쟁의 성격 자체가 civil war로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주의는 어떻게 보면 다시 이걸 갖다가 traditional war로 돌리는 과정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내전을 어떻게 더 추진시킬 것인가. 오늘날의 모든 전쟁을 내전의 관점에서 분석하자는 겁니다. 이라크 전쟁도, 아프카니스탄 전쟁도, 파업도, 페미니스트들의 투쟁도 모든 것들을(생태주의자들의 투쟁까지도) 내전 관점에서 분석하자는 것이죠. 내전의 관점에서 봐야 지금의 싸움이 제대로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역제국으로서의 다중

음... 그리고 나서 5.에 가면 다중의 어떤 특이성이라고 해야 하나요, 역제국으로서의 다중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역제국으로서의 다중의 원천은 아까 우리가 비물질노동 이야기를 하면서 경제적 영역이 아니라 생산의 영역이라고 했는데, 바로 생산의 영역에서 등장하는 주체성이다. 여기 보면서 이 다중의 역제국 기획의 규모, 그것을 좀 전에 얘기했던 글로벌 - 처음부터 local하고 national하고 global이라고 하는 3층을 염두 해두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쨌든 전근대고 근대고 탈근대이죠. 스케일에 있어서는. 글로벌을 로컬이나 내셔널에 돌려서도 안 되고, 현재는 글로벌 전쟁이기 때문에 글로벌 차원에서 다중의 기획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다중에 보면 absolute democracy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제국 책에서는 제시되지 않는 개념이죠. 절대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지금 이거하고 코뮤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뭐 내가 보기에 큰 차이가 없고, 코뮤니즘이라고 하는 텔로스가 절대적 민주주의 속에 들어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이걸 다중 3부의 주체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면 될 거 같고. 어쨌든 스케일이, 기획의 스케일이 투쟁의 스케일이 global 차원에서 벗어 나면은 안된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착취의 비장소라는 말이 나오는데, 착취의 장소가 예전에는 공장과 군대, 이런 곳이었던잖아요. 이 두 군데뿐만 아니고 몇 군데 더 있지만은, 사회가 어떤 군데 군데 착취의 장소가 있었던 것이죠. 그 착취의 중심점 외부에는 그 착취를 위한 보조영역들이 자리 잡죠. 그럼 뭐 가족 같은게 바로 그런 거죠. 가족 같은데서 노동력을 재생산해 주고, 그걸 공짜로 자본이 이용하고, 이런 식의 구조. - 공장 주변에 이렇게 배치되는 거. 이런 방식으로 place, 그러니까 장소가 있는 착취였다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소가 있을려면 물질적 상품이 생산되어야 하고, 예컨대 '아, 차는 울산에서 나오지, 거기서 현대에서 자동차 만들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금방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의 비물질노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소통 관계이기 때문에, 예컨대 '네이버가 어디에서 돈을 버는가?'하고 물으면 어디에서 버는 것이예요, 대체?

서울에서 버는 거라고 말할 수 있나요? 막연하잖아요. 구글은 그림 어디에서 누구를 착취해 가지고 돈을 벌지? 여기에 답하기 어렵죠. 분명히 그쪽으로 뭔가 돈이 몰려갑니다. 빌게이츠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돈을 번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잖아요. 다시 말해서 착취의 장소가 글로벌해지는 거죠. 이건 공간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글로벌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 의미와 개념적 의미가 다 있는 건데. 공간적 의미로는 우리가 지구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개념적 의미로는 보편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차원에서 장소place가 없는 거죠. place하고 space는 얘기했죠? place는 지시 가능한 지점이라면, space는 무엇과 무엇의 사이 이런 말이죠. 근데 이 사이는 유동하기 때문에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글로벌하게 되는, 그래서 장소보다는 space적인 것으로 착취가 바뀐다. 협력의 장소가 아니라 협력의 공간을 착취한다. 그러면 착취의 대상이 뭐냐하는 문제가 나올 터인데. 지금 착취의 대상은 예전에는 개걸 노동력이었습니다. 자본주의 아주 초창기에는... 개별의 노동력이었는데... 지금의 착취의 대상은 글로벌 자체. 일종의 전지구적인 공동체 그 자체인 것이죠. 이것을 사실은 착취한다.

▲새로운 야만으로서의 다중

그러면서 인제 바.에서 보면 다중을 새로운 야만으로 정의를 하는데요. 야만인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 없는 존재를 말하죠. 경험이 없지만 그러나 아주 강렬한 열정을 갖고 있는 존재죠. multitude의 경우에는 실제로 과거를 참조할게 없습니다. 이 역사 전체가 people의 역사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펼쳐나갈 것은 people을 답습하면 안 되는거예요. 사실상 과거를 잊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그리는 많은 책들에서 기억에 사로잡히지 않는 운동. 이것을 이야기 하는데요. 기억에 사로잡힌다고 하는 것. 이거는 과거에 운동이 복속될 위험성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 없는 투쟁, 기억에서 자유로운 투쟁 - 이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자유의 새로운 공간에서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탈근대적인 의미에서의 투쟁이 반복해서 혹은 기억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야만인이라고 다중은 이름 붙일 수 있다. 4에 한 얘기는 노동력의 새로운 형태로서의 다중이라고 했는데, 그 점은 지난 시간 비물질노동 개념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국에 대항하는 다중을 살펴보면 지금 제국 속에서의 혁명적 잠재력으로 다중이 존재한다, 이 얘기는 지금까지 얘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분명해 졌으리라 봅니다. 근데 그것이 정후적으로 나타나는게 5페이지 보면은 17년에 러시아혁명이라거나 49년에 중국혁명이라거나 30~40년대에 파시즘에 반대하는 투쟁들, 그리고 60년대에서 89년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해방투쟁들, 동부 같은 경우에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68년에 벌어진 투쟁이라거나 1980년대에 폴란드의 연대노조의 투쟁이라거나, 89년에 천안문시위 같은 거 -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료들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 비사회주의권 같은 경우에는 68혁명을 비롯해서 그것에 전지구적 파장들, 80년대에 들어와서는 비록 잠복된 형태이지만 전개되었던 DIY투쟁들이나 90년대에 이탈리아의 사회센터 운동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있겠는데, 여기서는 89년 꺼만 얘기하니까. 일단 그런 정도의 전사들이 있으면서 그 다중의 역사 속에 표면으로 자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중의 생산적 특이성: 자율, 협력

근데 라)에서 다중의 생산 특이성을 보면 다중은 어쨌건 네트워크적인 방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각 마디에서의 자기자율성이 역사성에서 가장 극한의 지점에 와있다는 것이죠. 자기개체적인 자립성이라 해야 할까요. 예전에 펭귄을 그린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 펭귄 - 그 제목이 펭귄이었나요. 그 보니까 알을 갖다가 품고 몇 개월 동안을 벌떡 서가지고 있더라고요. 펭귄이. 알이 부화할 때까지. 자기 털을 덮어가지고는. 다리가 안 아픈지도 모르겠네(웃음). 그니까 자기 몸의 에너지가 다 고갈될 때까지 버팁니다. 수개월동안 버티고 봄이 되면은 부화해서 그 새끼를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몸에 애를 먹일 수 있는 영양분이 더 이상 없는 거죠. 없어서 이거를 갖다가 수컷이 다시 알을 받아가지고 다시 지키고, 암컷이 인제 이걸 갖다가 바다 쪽으로 가서 포식을 해가지고 오는 거죠. 다 먹어버리지 않고, 이 담아가지고 와서, 나눠주는 그런 방식으로 사는데. 이거 엄청난 희생정신이 아니면 못하겠더라고요. 아주 그 정말 천리를 따른다고 할까. 그래서 그 펭귄들이 그 알래스카 지역에서 오만 바다에 있던 것들이 전부 그쪽으로 모여가지고 집단적으로 알을 까고, 부화를 시키고, 양육하는 그런 일종의 ritual이라고 해야 되겠죠. 집단의식을 갖다가 거행을 하는데. 펭귄에게는 북극과 남극을 판별할 수 있는 센서가 내장이 돼있어서 그쪽으로 올 수 있다고 해설자가 말했던 것을 기억하는데. 하여튼 이 종의 지속을 위해서 개체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음식을 구하러 갔다가 살아 돌아오는 비율이 크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태반이 죽고. 그니까 펭귄 한 마리에게는 알 까고 낳는 걸로 끝나는 경우가 사실 많은 거죠.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경우는, 고대나 중세일 때 보면은 동물과 유사하게 종의 원리가 개체의 원리를 압도하고 있었죠. 근데 지금 와서 개체적인 원리가 종의 원리보다 더 어떻게 보면 우위에 서는 듯이 보이는. 그래서 만약에 종 대신 개체라고 하면 개인주의가 되겠죠. 개체 대신 종 그럼 집단주의가 되겠죠. 어쨌건 예전에는 개체성이라고 하는게 발전이 안 되어 있었는데, 개체성 위에서 어떻게 종적 원리를, 커뮤니티적인 것을 과거의 집단주의와는 다른 방식으로 창출할 수 있겠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 관건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자율성과 한편에선 자율적이어야 하고 한편에선 협력적이어야 할 필요성. 공통적인 것의 구축을 외면해 버릴 때에는 전지구적에서의 개체성이, 전지구적 차원에서의 전쟁을 복돋아 주는 것으로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니까 이 개체성, 수직적인 개체성을 지지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개인주의는 신자유주의하고 어떻게 보면 통하죠.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 수평적인, 내전의 문제는 협력의 문제죠. 자율의 문제이면서 협력의 문제죠. 이게 인제 다중의 생산에서 들어나고 있는 특이한 특질이라고 보여 지고. 다중의 만약에 목적론이 있다면, 내재적 목적론이다. 포스트모더니즘 나오면서 목적론 나오면 가위표 먼저 치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목적론이 있다면 초월적 목적론이 아니라 내재적인 거죠. 수단과 하나가 되어있는 목적론. 어떤 걸 수단으로 삼고 그걸 자기 합의에 사용하는 목적이 아닌 수단과 하나가 된 목적론. 이 내재적 목적론을 다중은 갖는다. 그러고 해서 결국 꼬트머리에 보면 두 개의 도시가 있는데, 천상의 도시고 지상의 도시인 거죠. 두 개의 도시가 생겨나게 된다. 시민의 문제가 두 종류의 시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2교시: 다중의 정치적 프로그램들

▲다중의 첫 번째 정치적 프로그램: 전지구적 시민권

바로 이러한 두 도시 속에서 다중의 정치적 프로그램이 뭘겠는가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내겠는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지구적인 시민권. 전지구적인 시민권은 지상의 도시에서의 시민권을 말하죠. 이 전지구적인 시민권은 끝없는 길이라고도 문학적으로 표현을 해봤는데, 시민의 문제가 비장소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글로벌하기 때문에, 그 장소성에는 끝이 없다는 거죠. 보편적 공간에서의 이동의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지역주의 얘기를 했는데, 지역주의에 반하는 것이 이동의 문제라면 그건 결국 정말 그 디지털 침략주의로서의 노마디즘 아니냐?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은 네그리한테는 인정이 되요. 이민, 국제 혼인 같은 결혼, 전 세계적인 노동의 이동 - 이거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하이브리드. 문화적인 격리상태, 지역주의라고 하는 것이 자연의 산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본적으로는. 만약에 지역주의는 자연이고, 글로벌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라면 아마도 자연의 엄청난 권위에 호소해서 글로벌리즘을 격파하는 것은 쉽겠죠. 근데 지역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도 정치의 산물이라는 것이죠. 특정한 시기의 정치의 산물이기 때문에, 지금 이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막 방치돼버렸는데...

지우고 다시 또 본다면... 이런 식으로 지역이 돼 있잖아요. 이걸 국가라고 봐도 좋고 아시아 아프리카라고 봐도 좋습니다. 이런 식의 지역화가 돼있을 때에 이동의 문제는 이것들을 이렇게 묶는 연결시키는 횡단하는 해도 좋겠죠. 횡단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하이브리드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컨대 미국이 인권이라고 하는 담론을 사용해서 요즘은 전쟁을 하죠. 발칸반도에 폭탄을 터트릴 때에 사용되었던 전쟁 명분은 인권이었죠. 만약 미국이 중국이나 북한을 침공한다면 역시 인권을 들고 아마 전쟁하겠죠. 인권은 전쟁의 수단으로 되었는데, 그 면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걸 충분히 비판해야 되지만. 인권 담론의 확대는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전혀 없었던 그런 상황에 비해서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의 권력에 대해서 또 느끼게 만드는 기능을 수행했죠. 이런 이중적인, 인간을 죽이기도 하고 자애롭게 하기도 하는 이런 이중적 기능을 담당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동의 문제가 사실상 광속으로 이동하는 자본의 에어지원이 될 수도 있죠. 그럼 뭐 필리핀이나 네팔이나 미얀마나 한국으로 이민 오는 사람들의 경우에 그 한 천년은 분명히 자본의 가치증식을 크게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국내노동자와 이주노동자를 차별함으로써 국내노동자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역할도 하죠. ‘야. 너네 하고 싶지 않으면 집에 가라. 이 사람들 불러서 쓰마.’ 이렇게 해가지고 임금을 덜 주거나 안 주거나 이런 식으로 위협을 가할 수 있고 이게 실질적입니다. 그렇지만 마치 인권 담론의 확장이 인권이라고는 무엇도 없는 그런데에 어떤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FTA 협상 과정에서 노동권만은 미국이 내건 게 한국 노동자에게 더 유리했거든요. 노동자들의 권익에 대한 보호라거나 여러 가지 법에 대한 준수, 이런 문제에서 한국 자본은 막 대강 대강하고 이렇게 해서 초과착취를 하려고 했지만, 미국의 제한은 그게 아니었죠.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뭔가 법이 돼야돼,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었는데.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효과.

▲이동

그럼 이동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면에서 여러 지역들의 이 문화를 뒤섞어가지고 이 수직적인 선들 대신에 이 수평적인 선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묶일 수 있게 만든다. 그래서 이동은 중요하다. 그러나 만약 그런 측면에서의 이동이라면 천규석 씨의 비판. 침략주의자들의 이동하고 다닐 바가 없지 않느냐 하는데 대한 반대는 이겁니다. 이동의 자유로움이죠. 이동의 자유로움은 이동의 자율성. 이동에 대한 결정권을 누가 갖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이동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내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근데 지금의 이동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부분 강제된 거죠. 동남아에서 한국 온 사람들이 한국이 좋아서 온 것이 아니잖아요. 자국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물론 그 열악함은 그 사람들의 자연적인 못남 때문이 결코 아니죠. 세계의 지리정치 때문이죠. 그거 때문에 한국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강제된 이주라고 볼 수 있죠. 좁게 나눈다면 추방당한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외형상으로는 자유로운 결정이지만 그 내적으로 봤을 때에는 극히 부자유스러운 이동이 지금의 이동이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동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한다고 하는 거는 평생 동안 이동을 전혀 안하고도 살 권리, 살 수 있는 것도 이동의 한 방식인 것이죠. 칸트처럼 사는 거. 그것도 이동의 한 방식이죠. 그 다음에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게 정말 좋아서 그런다면. 김찬삼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김찬삼의 세계여행. 이 사람은 여행하는게 자기 직업이잖아요. 돌아 다니는게 이 사람의 취미이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고, 직업인거죠. 그런 사람은 돌아다니는 거고. 이런 양극단 사이 - 꼼작하지 않거나 계속 돌아다니거나 사이에서 자기의 능력과 취향에 맞춰서 이동하는 것이 진정한 이동이다. 강제돼서 이동되는 거 말고, 강제로 학교 가는 거. 이거 강제 이동이죠. 강제로 군대 가는 거. 이거 강제 이동이죠. 강제로 여행하는 거. 막 화제를 따내기 위해서 여행하는 거. 이거 준강제적 이동이죠. 이런 식의 이동은 자율적이지 못한 이동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자율적 이동을 전제로 한 이동. 이거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동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을 통해서 차이를 매기고 있잖아요. 불법이주자들. sans-papiers라고 해서 신분증 없는 사람들. 그리고 공권력을 동원한 추방과 체포, 감금, 폭행 이렇게 그 개념의 불법이라고 하는 이거는 기표적인 것이죠. 불법이나 합법이나 이거는. 몸에 막 불법이라고 달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사법적 기표상에서 합법과 불법을 갈라주는 것이죠. 그럴 때 불법에 바로 그러한 물리적 폭행들이 뒤따라 와야지 가는 그런 방식으로 시민권에 대한 제한을 자본이 가고 있는데, 바로 이거를 타파하는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글로벌 시티즌십이라고 해서 무한한 장소에서 구성되는 다중의 자유로운 시민권. 누구나가 다 어디에서나 동일한 시민권을 누릴 수 있는 거.

▲유럽통합 - 횡적 연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에서 유럽통합에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 네그리는 유럽 통합에 찬성표를 던졌었는데, 그때 당시에요. 그러니까 유럽에는 바로 불법이주

민들이 바로 인제 유럽 통합을 통해서 통합의 헌법 제정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다고 본거죠. 그래야만 저 불가리아라거나 동부권에 그 당시에 유럽 EU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 준비 중이거나 아직 가입되지 못했지만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그런 사람들 국가의 주민들에 획적 연대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관점이 컸던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불법성이라고 하는 게 여전히 국가의 행정영역에서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어떻게든 척결해보자 하는게 그 당시 찬성의 문제, 여러 동기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다중의 두 번째 정치적 프로그램: 사회적 임금권

두 번째가 사회적 임금권인데요. 사회적 임금권은 이제 시간과 몸이라고 하는 걸로 이름을 붙여놨는데, 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정통적으로 시간분할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었죠. 노동시간이나 얼마만큼 오래 노동했는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을 필요하게 오래 노동했는가. 그런데 노동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오래 살펴본 것처럼, 비물질노동에서는 측정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을 느끼죠. 바로 공동의 협력이 비물질노동의 주요한 힘이기 때문에, 누가 얼마만큼 이랬는지를 측정할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정서적인 노동 같은 경우에는 더욱 더 그렇습니다. 지적인 노동도 그러하지만, 그러므로 척도로서의 노동 시간에 따른 임금 지불. 임금이란 해당 노동력이 사회적으로 재생산 되는데 필요한 시간이죠. 임금의 개념이 그거죠. 임금은 그 노동력의 사회적 재생산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 논리- 노동 시간의 논리를 비물질노동에 적용한다면, 다중 전체가 사회적으로 재생산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되겠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노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 조차도 정서적인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존재가 노동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존재들이 재생산 돼야되지 않느냐. 노동 시간 척도로 그거를 부여한다면, 바로 노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건 맞는 거죠. 부르주아적 원리죠. 부르주아적 원리에 따를 때에 모든 사람에게 임금이 지불되는, 그게 사회적 임금이죠. 모든 사람에게 지불되는 임금, 사회적 임금.

근데 이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최저 임금하고 같지 않습니다. 최저 임금은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 받아야할 최저한의 임금이거든요. 그러나 사회적 임금은 그게 아니고 고용 피고용 여부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임명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가족 임금하고도 같지 않습니다. 가족 임금은 가부장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임금 시스템입니다. 중년 이상의 남성의 노동은 생산적 노동이고, 나머진 다 비생산적인데. 이 생산적 노동을 보조하는 역할들을 나머지 부분이 하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노동력이 생산되 나오는데 이 가장노동의 재생산에는 이 가장이 나온 자녀들의 재생산도 중요한 일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노동에 대한 임금 지불 외에 가족의 재생산에 필요한 것도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가부장제를 운전시키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역시 고용되어 있는 남성 노동자의 가족들에게만 가족임금이 지원되는 것이죠. 고용되지 못한 가장에게는 없죠, 아무것도. 그 다음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것하고 다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의 식별이 개별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에 세워진 것이죠. 그러나 사회적 임금은 노동이라고 하는게 집합적 활동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동일성, 비동일성을 가릴 수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중들 사이에 자율적인 협

력이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은 내재적 시간, 외부로부터 몇 시간 지났지? 이런 척도의 시간이 아니고 내재적 시간. 살아야한다는 것. 여기에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하고 생존해야 된다는 것을 갈라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생존임금하고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아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최저임금을 넘어서 생존임금으로 가면 모든 사람이 어쨌건 살아남아야지 하면 살아남는 비용은 다 다르잖아요 사실상. 상당히 다른데 우리가 생존이라고 했을 때에는 신체 재생산을 말하는 것이죠. 몸이 죽지 않고 사는 거. 이걸 지금 사실 자본가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죠. 각 개개인들이 살아남아야 이걸 이용할 수 있고 특별히 노년의 경우에는 노인들을 살리는 거는 정말 병원자본에게는 엄청난 중요성을 갖잖아요. 노인이 빨리 죽어버리면 안되죠. 길게 살면서 아주 많은 비용을 병원에 갖다 주어야만 병원은 행복해 진다는 것이죠. 그니까 살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근데 산소마스크를 끼고 링겔을 뽑고 하면서 살아나, 이걸 생존이죠, 그냥. 단지 몸이 죽지 않고 걸어다닌다거나 호흡을 한다거나 그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삶에 대한 자율권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자기가 자유롭게 - 이동에서의 자기 결정과 마찬가지로 자기 삶에서 강제되지 않는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집단적 차원이 고려가 돼야 됩니다. 나의 자유와 타자의 자유 사이에 연결 관계에 대한 고려가 없으면은 내가 자유롭게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선택지도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죠. 항상 커뮤니티 - 공통성 위에서 자기의 결정이 자율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임금. 그러한 임금이 사회적 임금이여야 되기 때문에 단순한 생존임금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질문

질문) 사회 임금은 국가가 지불하나요? 누가 지불하나요?

그거는 레벨에 따라 다를 수 있죠. 혁명의 진행 과정에서 맨 처음에는 예컨대 국가에게 사회적 임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그 이유는 국가가 스스로 내가 너희들을 대표하는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하는 주체에게 만약 당신이 정말로 우리를 대표하는 공동체라면 당신이 우리에게 사회적 임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할 수 있죠. 그렇지만 국가에게 그거는 형용모순이랑 다를 게 없죠. 국가는 배제하는 자 위에서 건립되기 때문에, 만약 배제되는 자가 없다면 국가가 필요가 없죠. 배제의 기능을 수행하고 그 부분을 공동체로 만들어 내는 게 국가이죠.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없는 사람. 즉, 비시민, 비국민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존립 조건이라면. 그러므로 국가가, 국가의 경우에는 모든 사람 - 즉, 비국민을 포함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장하라고 하는 요구는 국가에겐 모순으로 들리는 거죠. 무슨 얘기야, 내가 갖고 있는 천성에 맞지를 않는다고 국가는 말하겠죠. 근데 그러므로 이 요구와 국가 사이에 모순은 다른 해법을 끊임없이 도입하도록 이 갈등구조 자체가 동태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의 재편성의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 어떤 국가이나. 어떤 국가가 그렇다면 배제 없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 임금을 줄 수 있을 것이냐 - 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과정이 이 요구 속에서 나타나는, 이 요구를 계속 하는 것은 이 질문을 전사회 속에 일반화 시키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가, 어떤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임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모든 사람이 숙고할 수 있게 하면서, 그 숙고 속에서 집합적으로 새로운 국가 형태, 새로운 정부 형태를 창

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만드는게 이 슬로간의 목표죠, 사실. 국가에게, 국가가 내일은 이거를 보장해 줄거야라고 요구하면 보장해주겠지 하고 믿기 위한 슬로간이 아니라, 국가는 천성적으로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새로운 국가에 대한 상상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만드는 일종의 자극제로서 이 요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회적 임금은 궁극적으로는 예컨대 우리가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평의회라거나 소비에트라거나 코abs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시대에 변용된 형태로 나타난 그러한 다중의 자기정부만이 사회적 임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돼있죠. 그때 그걸 우리가 국가로 불러야할 것인가에 대해서 반갑습니다. 국가로 불 필요가 전혀 없죠. 국가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삶을 멈춰 세우게 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새로운 국가의 요구. 그래서 맑스는 코문을 1/2 state, semi-state라고 부르거든요. 반만 국가라는 겁니다. 코문이라고하는건. 반만 국가이고, 과도적 국가이죠. 국가 아닌 국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semi-state인 코문도 사실은 해체되어 있는 것이죠. 코문도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의 성격을 갖고 있는 한. 그러면 남는 거는 맑스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생산자들의 연합체였지 않습니까. 생산하는 사람들의 연합체이고, 각 개개인들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국가 없이 연합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끊임없이 모색해나가야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죠. 논리가 뭔가 이렇게 사회적 임금을 국가가 준다, 안 준다 이 문제는 일단 아니구요. 현존하는 국가는 결코 이것을 벗어날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렇지만 요구 하는 건 정당하다는 것이죠.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런 제스처는 취하고 있으니까.

▲다중의 세 번째 정치적 프로그램 - 재전유할 권리

마지막으로 재전유권이 있는데요. 재전유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랭귀지 문제, 언어문제입니다. 그니까 비물질노동에서 knowledge, information, communication, affect 이렇게 했었는데, 지식은 언어로 돼있죠. 정보도 언어로 돼있죠. 커뮤니케이션 언어로 되고 있죠. 어팩트의 경우는 우리가 꼭 우리가 말한 이 말은 아니지만 몸 언어로 되고 있는 것이죠. 그니까 랭귀지라고 하는거, 랭귀지라고 하는게 비물질노동에 어떻게 보면 보편도구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보편도구, 보편적 생산수단이라고 전통적인 개념을 도입하면, 언어가 생산수단이다. 혹은 다른 곳에서 네그리는 뇌가 생산수단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뇌가 뭔지가 막연하기 때문에. 저 생물학적 개념의 뇌. 우리가 알고 있는 해부학적인 뇌 있잖아요? 머리 일케 하면 대뇌, 소뇌... 이 뇌를 우리는 뇌라고도 볼 수 있지만, 만약 뇌가 사유를 하는 능력 그 자체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군대의 수뇌부,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럴 때는 수뇌부할 때 해부학적 뇌를 생각하는게 아니잖아요. 어떤 콜렉티브를 생각하난 것이죠. 그럼 콜렉티브가 뇌라면, 우리의 사회적 몸 전체가 뇌죠. 생각하는 힘이잖아요. 그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반지성, 다중지성 - 이렇게 불렀을 때, 다중이 지성체라면 다중은 곧 뇌인거죠. 뇌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는 가는, 요즘 인지생물학에서는 불명하게 됐습니다. 뇌라고 하는게 신경계가 이렇게 있고, 거기 중앙 통제를 하는 경계이 이렇게 있는 어떤 유기적 기관체일 것이라라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했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신경계가 여기에 가가지고 여기서 막 뭉친 다음에 요렇게 돼있거든요. 신경계가 여기에서 부피가 불룩하게 커져있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럼 이 부분이 뭔가 생각을 도맡아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어디까지가 뇌고, 어디까지가 뇌가 아닌지를 생물학자들, 특히 해부학적 생물학자들은 자르기를 좋아하지만, 실제로는 이 구획이 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정교한 경계, 뇌와 뇌 아닌 부분 - 이걸 다 인간이 개념적으로 붙여서, 이게 뇌야라고 해서 인위적으로 지정하고 있을 뿐이지, 뇌와 비뇌의 구획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니까 신경다발, 신경뭉침 정도의 지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사실 뇌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장소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자체가 관계적인, 뇌 자체가 관계적인 것이고 비장소적인 것이고, 그래서 사람 혼자 있을 때 생각하는 거하고 둘이 있을 때 생각하는 거하고 여럿 있을 때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 그 관계 속에 뇌가 사실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요 뇌, 생산수단은 언어이고 뇌이다. 그러면은 고전적인 맑스주의자들의 주장은 주요한 생산수단을 프롤레타리아트가 장악해서 사회화하는 것. 이게 공산주의로 가는 관제고지이죠. 그럼 대체, 언어하고 뇌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장악할 그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디를 장악해야지? 이 문제에 답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럼 과거 같으면 기관 산업들 - 철도라거나 중요한 물자를 생산하는 공장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장악을 했고, 러시아혁명 당시에는 거기에다가 은행을 장악을 했습니다. 이거는 장소적 생산단계에서는 맞는 거죠. 어느 특정한 생산 활동이 특정한 장소에 집중적으로 그것이 헤게모니적인 것으로 나타날 때에는 가능한데, 오늘날에 비물질적 노동 - 만약에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인터넷 같은걸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인터넷을 장악해야 인터넷을 장악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게 불가능해져버린 상황에서 결국 생산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장소적으로 있지 않고, 공간적인 것으로 좀 더 나아가서 코모날common한 것으로, 공통적인 것으로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장악의 문제가 아니라 이 코모날한 것의 접근의 문제로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access의 무제로 주어진다라는 거죠. public access 운동 같은게 벌어지고 있죠, 실제로. 그러면 퍼블릭에서부터 배제된 것. 그걸 우리는 코모날한 것으로 바꿔야 되겠지만, 퍼블릭에서 퍼블릭에 접근하지 못하는 컴퓨터가 없는 사람, 초고속 인터넷에 접근할 비용이 없는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 예컨대 대학에 교수들이나 연구소 소속의 사람들은 전세계 주요한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잖아요. 나는 그거 못하거든요. 요령을 내야 되요. 그니까 엑세스권이 계속 사유화되고 접근 못하게 됩니다. 이걸 하고 있는 핵심적인 수단이 지적재산권인 것이죠. 지적재산권을 통해서 접근에 대한 금지, 저지를 계속 하면서 결국 이 부분들의 어떤 장막을 치는 것, 울타리를 치는 것, 이게 인제 뉴인클로즈죠. 요게 소유는 안 되는데 울타리 치는 건 가능합니다. 장벽을 막는 거죠. firewall이런 식으로 해서 보안 이름으로 장벽을 막기도 하고, 하여튼 벽을 계속 세워나가는 것. 이 벽들이 전부 흠을 파는 이 벽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현재 자본의 축적의 방식이 돼있기 때문에. 코모날 엑세스. 공통적인 접근에 권리. 이것을 확보하는게 주요한 투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례로 이번 제국이라는 책에는 안 나오지만은, 다중에서는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이라는 사람이, 한국에도 한권 책이 번역이 되어있는데, creativecommons.org 이런 웹사이트를 운영을 하면서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사유화된 것을, 혹은 사유화될 것을 최대한 많이 공통적인 것으로 돌려자라고 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카피레프트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지금 이와 유사한 Creative Commons와 유사한 common license 운동을 현재 하고 있는 중인데요. common license 작업을 통해서 인제 이 사람들의 생산물들을 사유권에 중점을 가있는 지적재산권법이 아니라, 공통성의 초점이 가있는 지적재산권 라이선스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냄으로써 접근권을 확대시키자하는 운동을 지금 펼쳐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요렇게 인제 오늘 할 얘기는 다 얘기한 거 같은데요.